신 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중에서

ISBN 978-89-91057-25-9
ISBN 89-91057-00-4 (세트)

값 3,000원

역사다시읽기. 일곱

유신헌법반대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사다시읽기. 일곱

유신헌법반대운동

|정혜주 지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신헌법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정혜주 지음|

펴낸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펴낸이** | 함세웅 **펴낸일** | 2006년 12월 27일
주소 | (100-785)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소리통 | (02)3709-7500 **글통** | (02)3709-7530 | http://www.kdemocracy.or.kr
맵시 | 도서출판 오름 (02)585-9122,3 **찍은곳** | 서진인쇄
사진자료협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경향신문사, 동아일보사, 한국일보사, 이종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사다시읽기’를 펴내며

역사는 과거를 빌미로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가로막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는 퇴행의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무엇이며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를 가늠하는 생생한 현실인식입니다. 오늘의 삶과 사회를 직시하고 내일의 변화와 대안을 찾기 위한 항해의 나침반이자 지도입니다. 역사는 기억을 뛰어넘는 성찰이며, 지난날을 오늘의 눈으로 다시 보는 동시에 오늘을 재인식하는 진리 탐구의 망원경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과제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면 해방 후 우리 사회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확립과 민족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여전히 오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민주화운동 역사를 지금 이곳에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같은 과정이 우리 모두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 ‘역사다시읽기’ 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푸릇푸릇한 젊은이들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인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데 나름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차례

여는 말 _6

| 겨울공화국으로의 시간여행 _7

1 영구독재의 꿈, 10월 유신 _15

| 10월 유신의 전사(前史) _18 | 유신헌법의 내용 _29

| 겨울공화국이 시작되다 _36

2 겨울공화국을 사른 불꽃들 _39

| 1974년 1월의 죽음 _42 | 긴조9호 시대 _66

| 1979년의 현장 속으로… _90

3 12월의 밤, 그해 5월의 꽃바람 _99

| 어느 가을날의 등굣길 _100 | 불길했던 12월의 밤 _105

| 그해 5월의 꽃바람 _107 | 80년대의 전쟁 _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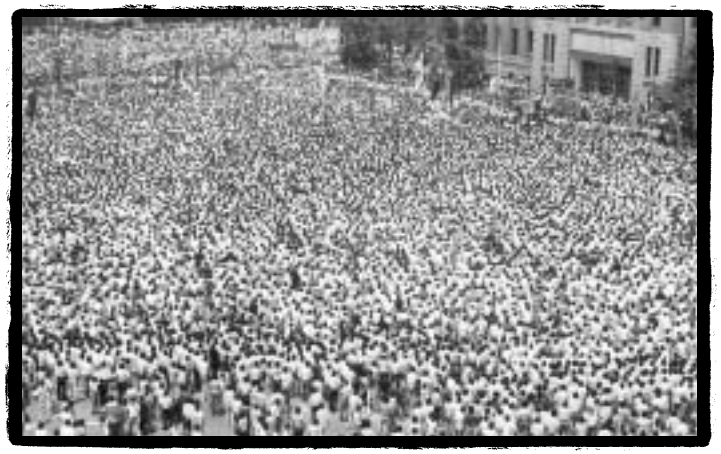
4 상처와 치유, 성장을 향한 여정 _109

| 유신체제가 남긴 것 _111 |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_113

| 더 열고 나아가야 할 과제들 _115

맺음말 _118

| 역사라는 벽화 앞에서… _118



●●●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이한열 열사 추모객들

●●●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월드컵 응원 시민들

겨울공화국으로의 시간여행

하늘아. 신록이 짙어지는 6월이다.

너는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간다. 'be the reds!' 그 티셔츠를 처음 봤을 때 엄마는 얼마나 소스라쳤는지 모른다. 'reds' 는 '빨갱이' 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 빨갱이가 되자!?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빨갱이가 되자' 는 구호가 새겨진 붉은 티셔츠를 입고 열광하는 모습이라니! 문득 내 안에 깊이 똬리 튼 반공교육의 잔재가 화들짝 깨어난 것이다.

놀라움 다음에는 격세지감이 몰려온다. 19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대 유신교육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했고 80년대에 이십대를 보낸 나에게, 6월은 '6 · 25' 가 있는 호국의 달이고, '87년 6월 항쟁' 의 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6월은 월드컵의 계절이 되었구나.

하늘아. 얼마 전 너는 엄마 옆에 서서 키를 대보며 말했지.

"엄마, 키가 이렇게 작았어? 왠지 슬퍼지려고 해."

사춘기에 접어든 너를 보며 엄마는 나 자신의 성장기를 되돌아보게 된다. 어느 세대들이든지 자기 세대만의 아이콘이 있지. 너희 세대의 아이콘이 인터넷, 게임, 연예인 코스프레, 월드컵과 붉은악마이듯이, 엄마 세대에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었을 거야. 한밤의 음악편지, 청바지와 세고비아 기타, 레몬문고, 고고와 디스코, 청룡기배 고교 야구…….

하늘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근대화로 치닫는 삶을 살았던 세대였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엄마 세대는 그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지. 보릿고개로 상징되던 절대빈곤이 없어졌고 '한강의 기적' 이 일어난 시대였어. 1963년에 태어난 엄마는 1970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단다. 1970년대의 십년 동안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를 다녔으니, 엄마의 학창시절은 1970년대라고 해야겠지.

그런데 그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늘 어두운 잿빛이나 군청색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엄마의 성장기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밤 새워 읽었던 소설, 짝사랑했던 선생님도 있었고, 시를 써서 주고받던 풋풋한 친구들도 있었지. 아마 즐거운 추억들도 많았을 거야. 하지만 그 모든 얼굴과 추억들을 비추는 조명 같은 것, 배경색은 어김없이 잿빛이나 군청색이다.

하늘아. 엄마가 태어나던 해부터 열일곱 살이 될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대통령 밑에서 살았다면, 믿어지니? 1961년 5 · 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4 · 19혁명으로 갓 움튼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고 들어선 박정희는 엄마가 태어나던 해인 1963년에 대통령에 취임했단다. 그는 두 번이나 대통령을 하고서도 모자라서 변칙적으로 삼선개헌을 감행했고, 세 번도 모자라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단다. 결국 박정희는 1979년 가을 자기 심복부하의 총에 맞아 죽어서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무려 18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했지. 하늘아. 엄마는 태어나서부터 열일곱 살이 될 때까지 '대통령=박정희' 라는 등식 속에서 살았단다. 대통령 앞에 '김' 이나 '정' 이나 '이' 씨 같은 다른 성씨가 붙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지.

그 시절 학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조회시간이 떠오른다. 추운 겨울 운동장에서 일렬로 반듯하게 줄맞춰 서는 데 한 시간씩이나 걸렸지. 혹시 줄이 비뚤어지기라도 하면 군대 하사관 출신인 교련 선생님이 달려와 따귀를 올려붙였단다. 조회는 군악대풍의 나팔소리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곤 했지. 애국가는 늘 4절까지 부르고……. 아침에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면 새마을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 점심시간이면 모두 운동장에 나와서 '국민체조' 라는 걸 했지.

당시 박정희 유신체제는 군사주의적인 억압과 통제로 국민의 정신과 생활을 옥죄고 있었단다. 유신체제는 정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커다란 병영으로 만들었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신교육은 숨 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처럼 '환경' 이었어. 엄마의 학창시절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운 것은 그 때문일 거야.

한 시인은 그 시절을 '겨울공화국' 이라고 불렀단다. 생명이 얼어붙은 동토의 왕국……. 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나무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더 단단한 나이테를 만들지.

하늘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늘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성

장에 관한 이야기란다. 한 사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 그 안에는 유신시대에 성장기를 보냈던 엄마 자신의 이야기도 아로새겨져 있지.

하늘아. 나는 이 이야기가 너에게 '옛날 옛적 엄마 어렸을 적에는……' 식의 복고풍 전시회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난과 시련이 나무의 나이테에 옹이를 남기는 것처럼, 하늘이가 살고 있는 2000년대의 한국사회는 30여 년 전 유신시대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30여 년 전 '겨울공화국' 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겨울공화국

여보게 우리들의 논과 밭이 눈을 뜨면서
뜨겁게 뜨겁게 숨쉬는 것을 보았는가
여보게 우리들의 논과 밭이 가라앉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르면서
불끈불끈 주먹을 쥐고
으드득으드득 이빨을 갈고 헛웃음을
껄껄껄 웃어대거나 웃다가 새하얗게
까무러쳐서 누군가의 발밑에 까무러쳐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을
보았는가
총과 칼로 사납게 윽박지르고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대는
지금은 겨울인가
한밤중인가
논과 밭이 얼어붙는 겨울 한때를
여보게 우리들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가

삼천리는 여전히 살기 좋은가
삼천리는 여전히 비단 같은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날마다 우리들은 모른 체하고
다소곳이 거짓말에 귀기울이며
뼈 가르는 채찍질을 견뎌내야 하는
노예다 머슴이다 허수아비다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잠든 아기의 베개맡에서
결코 우리는 부끄러울 뿐

한 마디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네
물려줄 것은 부끄러움뿐
잠든 아기의 베개맡에서
우리들은 또 무엇을 변명해야
하는가

서로를 날카롭게 노려만 보고
한 마디 깊은 말을 나누지 않고
번쩍이는 칼날을 감추어두고
언 땅을 조심조심 스쳐가는구나
어디선가 일어서라 고함질러도
배고프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어지럽지만 머무를 곳이 없는
우리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들을 모질게 재갈 물려서
짓이기며 짓이기며 내리모는 자는
누구인가 여보게 그 누구인가

등덜미에 찍혀 있는 우리들의 흉터,
채찍 맞은 우리들의 슬픈 흉터를
바람아 동지섣달 모진 바람아
네 쓸쓸한 칼끝으로 지울 수
없다
돌아가야 할 것은 돌아가야 하네
담벼락에 붙어 있는 농담거리도
바보 같은 라디오도 신문 잡지도
저녁이면 멍청하게 장단 맞추는
TV도 지금쯤은 정직해져서
한반도의 책상 끝에 놓여져야 하네
비겁한 것들은 사라져가고
더러운 것들도 사라져가고
마당에도 골목에도 산과 들에도
사랑하는 것들만 가득히 서서
가슴으로만 가슴으로만 이야기하고
여보게 화약냄새 풍기는 겨울 벌판에
잡초라도 한줌씩 돋아나야 할걸세
이럴 때는 모두들 눈물을 닦고
한강도 무등산도 말하게 하고
산새들도 한번쯤 말하게 하고
여보게
우리들이 만일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낙인을 지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과녁으로 나란히 서서
사나운 자의 총 끝에 쓰러지거나

쓰러지며 쓰러지며 부르짖어야 할걸세
사랑하는 모국어로 부르짖으며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들이 언 땅에도
싱싱하게 피어나게 하고
논둑에도 밭둑에도 피어나게 하고
여보게
우리들의 슬픈 겨울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일컫게 하고,
묶인 팔다리로 봄을 기다리며
한사코 온몸을 바둥거려야
하지 않은가
여보게

— 양성우

1

영구독재의 꿈,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대통령 박정희는 느닷없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해산, 정치활동 금지, 헌법 효력 정지를 포고하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입법기능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에서 냉전 시기에 만들어졌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개혁을 단행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2개월간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다……"

국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떨어진 이 비상계엄과 특별선언에 어리둥절했다. 한마디로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군사 정권이 시작된 5 · 16 군사쿠데타 당시 박정희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적인 수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일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10월 유신 선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10월 유신의 전사(前史)

하늘아.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 자주적인 근대화에 실패하여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비운을 맞았다.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외세에 의한 분단과 전쟁으로 민족공동체의 기반을 해체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분단체제하에서 남한은 대미의존 경제로 자율성을 상실했고 반공주의에 의해 모든 진보 이념을 차단당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12년간이나 지속되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아낸 것은 1960년 4 · 19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4 · 19 학생혁명의 순결한 피가 마르기도 전에 합법정부를 무력으로 뒤엎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1961년 5 · 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1963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제3공화국 헌법은 적어도 헌법 규범상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박정희 정권은 국가에 도전하는 야당과 반대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걸맞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 중앙정보부라는 정보기구를 이용해 정치인, 대학, 언론기관 등을 감시 · 사찰했을 뿐 아니라,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투쟁이나 1968년 부정선거 반대운동 등 반대세력의 활동을 억압했다. 따라서 제3공화국도 자유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내용과는 달리, 현실에서 정치사회나 시민사회의 요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가 집권했던 60년대는 전쟁을 치른 50년대의 혼란기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였다. 또 군인들은 부패 무능한 정치인들에 비해 덜 부패한 것으로 인식되어 일부 지식인과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강력히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은 국민들의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와 결합되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발전주의와 국민들의 '잘 살 수 있다.'라는 욕망이 성공적으로 결합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안정은 1960년대 후반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인해 흔들리게 되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 사건과 울진 · 삼척지구 공비침투사건과 같은 남북관계의 긴장, 중공과 미국의 수교, 미국과 소련 사이의 데탕트 등 동서 세계간의 긴장 완화, 닉슨의 괌 독트린에 이은 주한 미 7사단의 급작스런 철수 등 국제정세의 변화는 박정희 정권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증폭시켰다.

한편 1970년대는 역사적으로는 한국사회가 이전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유산을 큰 파동 없이 청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시기이기도 했다. 식민지시대의 억압이나 분단 초기의 혼란 상태, 그리고 전쟁이 초래한 파괴적인 상황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동안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움츠러들었던 역량들이 모처럼 발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70년대

는 한국사회가 오랜 좌절을 극복하고 역사발전을 도모할만한 모처럼의 기회였던 것이다.

3선 개헌

그러나 무한권력을 향한 박정희의 야망은 역사를 파행으로 이끌어갔다. 군사정권의 속성은 위기상황에서 군대를 이용한 폭력의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1966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기존의 헌법으로는 임기연장이 불가능하자, 대통령 임기 규정을 폐지하는 소위 3선 개헌을 추진했다. 백보를 양보해 평가하더라도 기껏 1960년대 조건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군사정권을 3선 개헌을 통해서 70년대에까지 연장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시대착오적인 반동이었다.

1969년 3선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야당인 신민당은 '3선개헌 저지투쟁위원회' 를 설치하고 대도시를 기점으로 개헌반대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재야세력은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 준비위원회' 를 결성하였고,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3선개헌 반대시위가 잇달았다.

그러나 박정희는 학원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휴교령을 내리고,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등 갖은 변칙을 동원하여 3선 개헌을 감행했다. 개헌안 국회 표결 전날인 9월 13일 전국 33개 대학

●●● 찬성, 반대 안내판이 있는 3선개헌국민투표 유세장

이 휴강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일요일 새벽 2시 여당계 의원 122명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신민회 의원들을 따돌리고 국회 제3별관에 모여 기명투표방식으로 찬성 122, 반대 0표로 3선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던 것이다.

10월 17일 3선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1971년 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집권체제의 디딤돌을 놓았던 것이다.

유신체제 등장의 국내외적 요인

1969년 3선 개헌에 성공함으로써 승승장구할 것 같던 박정희 정권은 곧이어 안팎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경제적

위기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 · 도시빈민의 폭발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닉슨독트린으로 동서 냉전체제가 약화되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것은 경제개발과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박정희 정권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도전과 위협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더욱 분명해졌는데,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자.

경제적 위기

박정희 정권은 70년대 들어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수출 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소득을 올리겠다는 기본 방침은 자본재와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한계를 노출하였다. 국제 수지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적자폭은 갈수록 증대되었다. 외환 수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1969년 8.9%, 1970년 11.6%, 1971년에는 단기차관을 합쳐 20%, 1972년엔 23%에까지 이르는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다.

중화학부분의 주요 업체들을 포함한 외국자본 기업들이 부실화되었고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했다. 정부가 부실기업 조사를 통해 정부지불보증 차관업체와 은행관리업체 83개사 가운데 40%가 부실기업이라고 밝혀질 정도였다. 이는 이권과 특혜로 얽힌 권력구조의 총체적인 부정 · 부패가 야기한 국가파산의 국면이었다.

민중의 저항

총칼로 장악한 절대 권력은 빠르게 부패했고 그들이 야심에 차서 진행한 공업화와 조국 근대화정책은 대다수 농민과 도시빈민 · 노동자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70년대에 접어들자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불평등 문제와 민중들의 저항이 폭발했다. 이미 400백만 명을 넘어선 노동자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계급으로 성장했다. 1970년에 조직노동자는 50만 명에 이르렀고 2,500개의 노동조합이 새로 결성되었다.

1971년의 노동쟁의는 그 전해인 70년의 160여 건에 비해 10배에 이르는 1,650여 건에 달했다. 이는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도 되지 않는 기아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기층민중은 경제의 불균형 성장과 차별정책으로 이미 희생의 제물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곳곳에서 불만에 쌓인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인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한 것을 계기로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개신교 쪽의 저항운동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도시 변두리에서 대규모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던 도시

●●●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광주대단지의 사람들

빈민들의 누적된 불만은 1971년 8월 경기도 광주대단지 폭동으로 표출됐다. 광주대단지사건은 당국의 무모한 개발계획과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태도, 빈부격차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광주대단지 소요사건은 도시 빈민지역에 대한 당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였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도시 빈민층에 관심을 갖고 빈민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해오던 성직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지식인층의 저항

이런 와중에서 1970년 6월 시인 김지하가 유명한 담시 '오적(五械)'을 『사상계』와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에 발표하여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의 부패와 전횡을 통렬하게 풍자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김지하는 관련자들과 함께 투옥되었다. 또한 1971년에 발생한 언론인들의 언론자유 수호운동, 사법부 파동과 판사들의 자율화 요구, 교수들의 대학 자율화 선언, 의료인 파업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었다. 이런 사태는 박정희 정권에게 권력상실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고 체제부정으로 이어질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재집권 위기

한편 3선 개헌 헌법에 의거해 확보된 1971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옛 자유당 정권 못지않은 부정선거를 치르고 가까스로 선출되었다. 선거자금과 행정력을 이용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선거운동과 정부 당국의 공권력을 이용한 부정투개표로 겨우 승리를 얻어냈던 것이다.

선거결과는 앞으로 박정희가 선거를 통해서 재집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4년 후 권좌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 박정희와 밀착된 주변 인물 가운데 누구도 박정희 이후에 닥칠 기득권 상실의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권 연장을 위한 특단의 방책을 도모해야 했다.

국제정세

유신체제를 도모하는 데 세계정세의 변화도 좋은 구실이 되었다. 베트남전 개입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탕트 정책을 천명했다. 그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이 추진되었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책도 강구되었다. 박 정권은 주변 국가들의 남북대화 압력이 가해지고 일부 주한 미군의 철수가 진행되자, 냉전구조 아래 반공주의로 유지되던 체제를 불가피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반공주의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이념을 강구해야만 했다.

1971년 위수령 발동과 국가비상사태 선언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향한 행보가 노골화되면 될수록 민중의 저항은 더욱 강렬해졌다. 특히 학생운동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박 정권은 학생운동을 제압하기 위한 공격을 먼저 개시했다.

1971년 1월27일 문교부는 대학 교련교육의 대폭적인 강화를 발표하였다. 대학을 병영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병영 안에 가두어 두려고 나선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를 "민족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연일 교련반대

●●● 위수령으로 겁먹은 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성토대회와 시위를 벌였다. 4월 중순 정점에 달했던 교련반대 시위는 대통령선거에서 갖은 부정으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자 부정선거규탄 시위로 바뀌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서울대에 휴업령을 내리고 조기방학에 들어가게 했다. 2학기에 들어서서도 학생시위가 가라앉지 않자, 박 정권은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 병력을 서울대, 고려대 등 7개 대학에 진주시켰다. 또한 1,889명의 학생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119명을 구속하고 8개 대학에 무기한 휴업령을 내렸다.

박 정권은 위수령도 모자라 12월 6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12월 27일에는 초헌법적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경제규제 명령, 국가동원령 선포, 옥외

집회와 시위 규제, 언론 · 출판에 관한 특별조치,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제한, 군사상의 목적을 위한 세출예산 조정 같은 특별조치 권한을 갖게 되었다.

7 · 4남북공동성명

박정희가 유신체제로 가기 위해 만든 시나리오 중에 가장 공들인 작품은 7 · 4남북공동성명이었다. 1972년 7월 박정희 정권은 남북한관계에서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7 ·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외세의 의존 없는 평화통일, 상호비방 중지와 군사충돌 방지, 제반의 남북교류 활성화, 남북적십자회담의 적극화, 서울-평양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민족의 이름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약속 등 7개항이었다.

7 · 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정권에 가장 견결하게 맞섰던 민주화운동 인사 장준하조차도 민족통일에 긍정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할 만큼 전향적인 것이었다. 7 · 4공동성명이 나온 1972년은 휴전으로부터 겨우 19년이 지난 시점이고 1948년 분단정부로부터도 2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사회 내부에서 분단에 순응하지 않는 통일에 대한 잠재된 열망은 언제라도 분출할 수 있는 휴화산 같은 요구였다. 어느 방향으로 통일문제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잠재된 요인들에 의해 권력의 향배도 바뀔 수 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박정희는 극단적인 냉전 상황과 경제적 난관을 이용해 권력기반을 조성해왔지만,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무너지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통치하거나 권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7 · 4공동성명은 한편으로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원하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국민의 위기감을 자극해 판단력을 교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7 · 4남북공동성명 발표 석 달 후인 10월 17일 박정희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통한 개혁을 단행 한다.' 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도모한 것이다. 유신체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감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변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오히려 기만적으로 왜곡하여 거짓 위기감을 조장한 가운데 정권의 위기를 넘기고 영구집권의 기회로 삼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유신헌법의 내용

10월 17일 선포된 비상계엄 선포 특별선언은 초기에는 이렇다 할 명칭도 없이 단순히 '대통령특별선언' 으로 호칭되었다가, 열흘 후 비상국무회의가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후 뒤늦게

'유신' 이라고 이름 붙여져 선전되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선언 가운데 나오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구절에서 끄집어낸 것이었다. 이것만 봐도 유신 헌법은 애초에 전체적인 구상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서둘러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층 내부에서조차 합의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쿠데타적 수법으로 오직 종신집권을 위한 권력 강화의 목적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것이다.

그러면 유신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대통령 간접선거제

유신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과 권한을 변경시켰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대의원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으며, 중임 제한 규정없이 무제한으로 재선될 수 있었다. 이는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3선 개헌과 같은 절차를 더 이상 밟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었다.

대통령은 간선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이자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상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러한 포괄적 권한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저 정해진 대통령을 뽑는 형식적인 선거인단에 불과했다. 유신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어용단체로 만들기 위해 먼저, 대의원 후보나 대의원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했고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직을 겸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정당이 대의원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런 조항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비정치적 조직으로 만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야당 정치인들이 대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대의원들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정부는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후보등록 과정에서부터 반정부 인사들이 대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중대장 출신 등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인 박정희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리는 만무했다.

또한 유신헌법은 대통령 입후보를 위해 정당의 공천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요구했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박정희 1 인만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6년 임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는 단순한 수사에 불과할 뿐이었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치장

에 불과했으며 투표 절차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권력 획득을 위한 경쟁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마당에, 이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의 부정

유신헌법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전국구 의원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존의 방식을 변경시켰다. 즉 국회의원의 2/3만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나머지 1/3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추인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는 대통령의 입법부 장악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써, 197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의 급격한 의석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동의를 받아 유신정우회라는 이름으로 임명했다. 또 1 선거구에서 2명을 뽑도록 바꾼 선거법에 따라 여당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였다.

입법부의 독자적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했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 반면 국회에는 대통령탄핵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해임 결의를 할 수 있었지만, 국회는 항

●●●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간접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상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이로써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을 법률로 전환시켜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결국 여당에 의한 국회 장악과 더불어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위는 국회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신헌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여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

유신 헌법은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 판사들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법관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이전시켰다. 또한 헌법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원이 갖고 있던 위헌법률심사권뿐 아니라 탄핵결정권, 위헌정당해산권을 부여했고, 대통령이 헌법위원회의 9인 중 3인을 선임하는 동시에 국

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임명하게 했다. 이에 따라 유신체제에서 사법부는 대통령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유신 헌법 선포 직후인 1973년 박정희 정권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반발했던 상당수의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례는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과시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암묵적으로 법관들에게 유신체제에 동조할 것을 강제했다.

한편 헌법 규정은 아니지만 박정희 정권은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경력 15년 미만의 판사가 개업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근무한 법원의 본원 관할 구역에서는 퇴직 뒤 3년 동안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만일 재임용에 탈락할 경우 변호사로서의 생활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판사들이 정권에 반대되는 소신을 갖고 판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서울 형사지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마음대로 시국 사건의 판결을 조정했다. 수석부장판사는 소명이 부족한 시국사범의 영장을 비밀리에 발부하거나 시국사건의 양형을 결정했으며 영장 기각에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판사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고문당했음을 호소하는 '조작 간첩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

대통령 긴급조치권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저항과 민주화 투쟁이었다. 유신선포 직전 일어난 각계의 자율화 요구와 민중의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5·16군사쿠데타 이후 10년간 전개된 맹렬한 반정부시위는 박정희 정권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으며, 권력 지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도전이었다. 이를 제압하지 않고는 종신 집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치가 다름 아닌 무한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였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정전반에 걸쳐 긴급조치권을 선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계엄령과는 별도로 반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비상조치권이었다.

더욱이 긴급조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긴급조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그 건의를 수용할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유신시대 내내 긴급조치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주

된 법적 도구로 활용되었고, 유신체제를 유지시킨 강제력을 대표하는 제도적 수단이었다. 박정희는 유신시대 내내 긴급조치권을 이용해 정국을 항시적 계엄 상태로 바꾸었다.

정리하면, 유신헌법은 대통령 일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완벽하게 집중시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고, 연임에 제한이 없으며, 입법 · 사법 · 행정의 상위에 존재하므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한다는 '주권재민' 의 민주주의 원리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 라는 명분을 내걸고 단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부정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자신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한 또 하나의 쿠데타였던 것이다.

'겨울공화국' 이 시작되다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대학에는 휴교조치가 내려지고, 공공기관과 언론사에는 계엄군이 진주했으며, 전 언론은 사전검열을 받았다.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고, 이 유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11월 21일 실시되었다. 모든 언론에 재갈이 물린 가운데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였다. 그 결과 유신헌법은 91.9%의 투표율에 91.5%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12월 15일 유신헌법에 따라서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를 구성했다. 대의원들은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투표를 통해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바야흐로 유신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유신체제 아래서 국민들은 오로지 생존과 안보라는 거짓 위기감에 내몰리며 모든 문명국가에서 국과옥조로 여기는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송두리째 유린당한 채 가위눌려 지냈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대신 눈가리개와 귀마개, 재갈이 채워졌던 시대, '겨울공화국' 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2

겨울공화국을 사른 불꽃들

하늘아. 만약 일제 식민지시대에 안중근의사나 윤봉길의사 같은 독립 운동가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사는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을까? 만약 유신헌법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유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저항 하나 없었더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을까?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겨울공화국' 의 밑둥치에 '타는 목마름으로' 불꽃을 지핀 사람들이 있었단다. 암흑의 얼어붙은 땅에서 내일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져 불꽃을 피워 올렸던 사람들…….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길을 이루고 마침내 겨울공화국을 허물어트렸던 역사. 하늘아.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만한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단다. 지금 세계가 감탄하고 경이감을 느끼는 한국사회의 열정과 역동성은 그 시절에 뿌려진 씨앗이란다.

유신시대의 특징은 박정희 개인이 종신집권을 위해 '10월 유신' 이라는 쿠데타적 사건을 일으킨 것에서 비롯된다. 박정희는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줄곧 자신의 집권연장과 종신집권을 위해 먼저 국민을 공격하곤 했다. 정상적인 헌법을 폐기시키고 유신헌법을 선포한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 공격에 대한 저항으로 유신반대운동이 일어났다. 모든 언론이 재갈 물리고 비판이 금지된 상황에서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시절이었다. 박정희는 저항세력을 초전박살, 발본색원하기 위해 감시와 체포, 고문수사와 사형 등 악랄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저항세력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조직사건과 간첩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반유신운동사' 는 '유신탄압사' 이기도 하다. 유신체제의 공격과 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반유신민주화운동이 형성되고 성장해갔던 것이다.

반유신민주화운동은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던 때로부터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까지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이는 1972년 10월 유신에서 긴급조치 1, 2호와 4호, 7호가 선포되고 해제되기를 반복하던 1975년 상반기까지,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 이후 해제되는 시기까지,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4년 1월의 죽음

유신독재가 시작된 이후 한동안 정치권이나 재야 민주인사들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침체된 분위기에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학생운동세력도 대대적인 구속과 휴교령으로 철퇴를 맞고서 숨죽이고 있었다.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것은 권력의 새로운 공격이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

1971년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김대중이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그의 뜻을 알아차린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특수공작에 착수했다.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할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었던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수립되자 해외에서 유신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1973년 미국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한 데 이어, 일본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결성을 추진 중이었다.

김대중이 일본 도쿄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것은 1973년 8월 8일 낮이었다. 행방불명이 되었던 그는 납치 129시간 만인 8월 13일 밤 10시 20분경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 내던져졌다. 김대중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는 5, 6명의 청년에게 납치돼 온몸이 묶인 채 자동차로 실려 모터보트로 큰 배에 이송되어 10여 시간 항해 후, 11일 오후 한국해안에 상륙해 초가에 감금당했다가 13일 서울로 왔다는 것이었다. 8월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기관이 김대중 납치사건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한국정보소식통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고 보도했다. 김대중이 바다에 던져져 수장되기 직전 미국정보부의 압력으로 구출되었다는 소문이 흘러 나오기도 했다.

첫 봉화를 올린 학생운동과 헌법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국내외에 박 정권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마침내 유신 선포 이후 최초로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생 300여 명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서울문리대의 학생시위는 서울법대와 서울상대로 번져갔다. 유신정권은 이들 시위에 대해 215명 연행, 95명 구속으로 강경 대응했다. 나아가 대학을 압박하여 97명의 학생을 징계토록 했다.

그러나 강경탄압에도 시위의 불길이 잦아들지 않았다. 서울대 시위를 첫 봉화로 전국 각 대학에서 반유신 학생시위가 잇달아 일어났다. 학생시위에 힘입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재

야와 종교계, 언론계 등 민주화운동 세력들도 유신반대운동에 떨쳐나서기 시작했다. 유신선포 1년 만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통제 구조가 사상누각처럼 흔들리게 된 것이다.

11월 15일 재야민주화운동 진영은 학생시위를 지지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강기철, 계훈제, 김숭경, 김재준, 김지하, 박삼세, 법정, 이호철, 정수일, 조향록, 천관우, 함석헌, 홍남순, 이재오, 지학순 주교 등 15인은 "지난한 상황 속에서도 감연히 자유와 사회정의를 절규한 젊은 학도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민주체제를 근저에서 재건설"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시국선언'과 '시국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공론화시켜 나갔다.

마침내 1973년 12월 24일 재야운동진영은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유신헌법의 반민주성을 성토하면서 그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1974년 1월 7일에는 이희승, 이헌구, 김광섭, 안수길, 이호철, 백낙청 등의 문인 및 지식인 61명이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자 정국은 개헌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1974년 초에 제1야당인 신민당이 개헌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으며, 지식인과 종교인을 중심으로 개헌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이 잇달아 발표되었다. 또 공화당의 초대 총재이자 당의장을 역임한 정구영과 전 사무총장 예춘호의 공화당 탈당으로 유신체제 내부에서도 동요가 나타났다.

다급해진 박정희 정권은 개헌운동을 초장에 봉쇄하려는 의도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했다. 당시의 가파른 상황은 김지하의 시 '1974년 1월'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1974년 1월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좁고 추운 네 가슴에 얼어붙은 피가 터져
따스하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던
그 시간
다시 쳐 온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모두들 끌려가고 서투른 너 홀로 뒤에 남긴 채
먼 바다로 나만이 몸을 숨긴 날
낯선 술집 벽 흐린 거울 조각 속에서
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를
등에 꽂은 초라한 한 사내의
겁먹은 얼굴

그 지친 주름살을 죽음이라 부르자
그토록 어렵게
사랑을 시작했던 날
찬바람 속에 너의 손을 처음으로 잡았던 날
두려움을 넘어
너의 얼굴을 처음으로 처음으로
바라보던 날 그 날
그 날 너와의 헤어짐을 죽음이라 부르자
바람 찬 저 거리에도
언젠가는 돌아올 봄날의 하늬 꽃샘을 뚫고
나올 꽃들의 잎새들의
언젠가는 터져 나올 그 함성을
못 믿는 이 마음을 죽음이라 부르자
아니면 믿어 의심치 않기에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저 모든 눈빛들을 죽음이라 부르자
아아 1974년 1월의 죽음을 두고
우리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자
온몸을 흔들어
온몸을 흔들어
거절하자
네 손과
내 손에 남은 마지막
따뜻한 땀방울의 기억이
식을 때까지

— 김지하

긴급조치 1호와 2호

1974년 1월 8일 발표된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헌법의 개정·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논의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긴급조치 2호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긴급조치 1, 2호에 의해서 1월 13일 장준하, 백기완 등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고 관련된 다수 인사들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2월 25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문인과 지식인들이 포함된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이호철, 임헌영, 김우종, 장을병, 장병희 등을 구속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는 유신헌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장준하, 백기완 등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하고 연세대학생 7명에게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신반대운동은 강경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4년 1월 21일 서울대 의대생들은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유신반대시위를 일으켜서 긴급조치

최초의 구속자를 낳았다.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대학가는 본격적인 유신반대시위 열풍에 휘말렸다. 1974년 3월 21일 경북대학생들이 '반독재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시위를 벌인데 이어 3월 28일에는 서강대, 4월 1일에는 연세대 등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다.

경찰은 3월 말부터 요주의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수십 명을 일제히 사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잇달아 소규모의 시위와 검거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학생운동 세력은 4월 3일에 전국의 대학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로 약속하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이러한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던 유신정권은 학생들의 시위를 차단하는 한편, 오히려 이를 새로운 탄압의 구실로 활용하고자 했다.

1974년 4월 3일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대 등 주요 대학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된 〈민중, 민족, 민주선언〉과 〈민중의 소리〉,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이 일제히 배포되면서 시위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시위는 사전에 정보 누설로 인하여 제대로 시작해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유신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 것은 이날 밤 10시였다.

●●● 긴급조치 4호 발표

긴급조치 4호와 민청학련 사건

1974년 4월 3일 밤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하에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반국가적 불순행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확증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 활동이 대두되고 있어 불순 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헌법 절차에 따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고 했다.

이는 학생 시위를 이용해 정권의 위기국면을 타개하려는 기만책이었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공포분위기로 몰아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려는 의도였다.

긴급조치 4호는 지금까지 선포된 긴급조치 가운데서도 가장

살벌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 활동금지, ②교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금지, ③데모주동자 최고 사형, 긴급조치 위반 학교는 폐교조치 가능, ④치안유지 위해 지방장관 요청하면 학내에 병력출동 가능, ⑤민청학련관련자 8일까지 고지하면 불문 등이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자체의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안 나오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와 집회 · 시위 · 성토 등이 모두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을 방송 · 보도하는 일도 금지되었다. 만약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군법에 회부하여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으며, 이런 일이 부당하다고 긴급조치를 비난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긴급조치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 직접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4호 위반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폐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요컨대 데모하는 학생이나 이를 보도하는 기자는 최고 사형까지 각오해야 했고, 데모하는 학교는 폐교될지도 모르는 운명에 직면했던 것이다.

긴급조치 4호의 타깃이 된 민청학련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3주일이 지난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좌파, 혁신계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74년 4월 3일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한 불순반정부세력으로, 이들은 북괴의 통일전선 형성공작과 동일한 4단계 혁명을 통해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권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과도적 정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민청학련의 배후 주동인물로 전 인혁당 당수 도예종과 여정남 등의 불순세력, 재일조총련 비밀조직의 망원인 곽동의와 곽의 조종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인 일본인 2명, 기독학생총연맹 간부진, 그리고 이철, 유인태 등 주모급 학생운동자와 언론인 유근일 등을 지목했다.

민청학련의 배후인물은 그후 재판과정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전 대통령인 윤보선을 비롯하여 김동길, 김찬국 교수, 박형규 목사,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 등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정부전복을 격려하거나 거사자금을 대주었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민청학련 사건은 당시까지 단일 사건으로는 해방 이후 사상 최고인 1,204명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 중 253명을 군법에 송치하여 55명이 1차로 기소되었다. 이 중 대부분은 학생들이었으나 배후조종자로 인혁당과 조총련계 외에도 교수, 종교인 등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급조치 4호 관련자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은, 첫 공판이 시작된 6월 15일부터 마지막 결심공판이 있은 10월 11일까지 118일간 계속되었다. 이 동안 군법회의 공판정은 연일 사형, 무기

징역, 20년, 15년 등 유래 없는 중형을 선고하여 내외에 큰 충격을 던졌다.

재판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변론 내용이 법정모독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비방을 금지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월 15일 구속되기도 하였다.

7월 21일 열린 비상군법회의 첫 공판에서는 이철, 유인태, 여정남, 김병곤, 나병식, 김지하, 이현배 등 9명에게 사형, 유근일 등 7명에게 무기징역 등 가혹한 형벌이 선고되었다. 이에 앞서 7월 8일 열린 인혁당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서도원, 도예종 등 7명에게 사형을, 김한덕 등 8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모두 203명이었는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1천 8백여 년이 될 정도였다. 이 숫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만의 형량이다. 이는 평균 선고형량이 10년이 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민청학련이란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단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평화시위를 계획했을 뿐 국가변란이나 공산혁명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앙정보부에서 물고문 · 전기고문 ·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등 가혹한 육체적 압박을 통하여

●●● 사형이 확정되자 울고 있는 민청학련사건 관련 가족들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찰관이 구치소까지 찾아와 구타 · 고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서가 작성되었다. 심지어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공소장을 작성해놓고 그 공소장대로 진술서를 강요하는 식의 수사도 다반사였다.

민청학련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관련자 대부분이 기독교 관계자였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은 주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소속이었고, 배후 지원자로 지목된 저명인사들도 기독교 관계 인사였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항의와 지원이 대정부 성토로 번져갔다. 특히 지학순 주교가 연행되어 징역 15년 · 자격정지 15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동안 국내의 가톨릭계뿐만 아니라 로마교황청을 비롯한 세계 가톨릭계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항의와 석방 탄원을 계속하였다.

학생과 종교인 · 문인 등이 사형 ·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잇달아 선고받게 되자 국제적인 여러 조직체로부터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동정과 탄원의 소리가 비등했다. 미국 · 일본 · 영국 같은 한국의 우방 각국으로부터도 비난과 항의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제기구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경우 74년 7월 말 한국에서의 반정부세력 탄압과 군사재판의 실태를 조사한 〈버틀러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를 토대로 박 정권에 대한 긴급조치 해제 · 정치범 석방 등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 일본 · 서독 등의 교포들이 박 정권을 규탄하는가 하면, 미하원 외교위에서 '한국의 인권문제' 공청회가 열리고 박 정권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민주회복국민회의]와 지식인들의 반유신민주화운동

유신체제는 야만적인 탄압으로 학생운동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었지만 더욱 광범하고 조직적인 반유신민주화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1974년 9월이 되자 대학가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석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전국적 규모로 시위를 벌였다. 1974년 9월 23일에는 함석헌, 김재준, 천관우 등이 유신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문인들도 나섰다. 1974년 11월 18일에는 문인들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결성하고 '문학인 101인 선언'을 발표했던 것이다. 문인들은 내외신 기자 20여 명이 취재하는 가운데 발표한 「문학인 101인 선언」에서 유신체제의 근대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①긴급조치 구속자 석방, ②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신앙 · 사상의 자유 수호, ③서민대중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 ④자유민주주의 헌법 개정, ⑤주장하는 바의 당리당략적 이용배제 등을 결의했다. 30여 명의 문인들이 광화문에서 선언문을 발표하자 사복경찰들이 달려들어 선언문을 탈취했다. 문인들은 '구속 시인 석방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네거리 쪽으로 가두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되었다.

1974년 11월 27일에는 윤보선, 함석헌, 유진오, 이희승, 이병린 등 사회원로와 각계 인사 71명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고 '국민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국민선언'에서 민주헌법제정, 복역 중인 구속자와 연금인사의 석방 · 정치적 권리회복, 언론자유 보장 등 총 6개항을 요구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의 결성으로 반유신민주화운동은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은 언론인들이 유신독재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싸움에 나선 것이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학생, 종교인, 지식인 등이 대대적으로 투옥되는 상황에서 유신정권은 1974년 10월 19일 각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국장을 소집하여 사회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기사를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4개항의 보도지침을 전달했다. 데모 · 퇴학 처분, 휴강 등 학원 내 움직임을 일체 보도하지 말 것, 종교계의 민권운동을 보도하지 말 것, 외국 특히 월남에서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사를 취급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언론장악 시도에 언론인들이 저항하자 중앙정보부는 당시 한국일보사 사장과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연행하였다.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은 10월 23일부터 중앙정보부의 언론인 연행 등에 항의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대회를 개최하여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했다. 다음날 한국일보 기자들도 민주언론사수를 선언하는 등 전국 31개 신문사의 기자들이 정부의 언론 통제를 거부하고 자유언론을 실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유신정권은 1974년 12월 16일 당시 반유신 언론의 선두에 서 있던 동아일보에 대해 광고 탄압을 가하여 사상 초유의 백지광고 사태를 야기했다.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기자 무더기 해고사태에 국민들의 격려광고가 빗발치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동아일보를 돕기 위한 범국민적 모금운동을 제창하고 전개했다. 동아일보에 대한 범국민적인 호응은 유신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힘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 민주회복 국민선언대회를 열고 있는 각계 대표들

유신헌법 찬반투표

반유신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박 정권은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 등 재야 민주운동 세력은 국민투표 자체를 거부했지만, 유신정권은 관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투표는 찬반토론을 일체 허용하지 않은 채 "유신체제 반대하면 붉은 마수 밀려온다." 는 식으로 조성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80% 투표율에 찬성 73.1%였다.

유신정권은 선거결과를 유신헌법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위장하면서, 2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긴급조치 1호 · 4호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대폭 석방했다. 이 조치로 대부분 인사들이 석방되었지만, 인혁당 관련자들과 학생 신

분이 아닌 민청학련 핵심 관련자들은 제외되었다.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법살인

유신정권은 민청학련사건과 동시에 민청학련의 배후조종 세력으로 '인혁당(인민혁명당)' 이라는 가공의 용공단체를 고문으로 조작하여 발표했다.

"공산주의자들인 이들(인혁당 관계 피고인들)이 북괴의 대남적화 전략 · 전술 목표에 영합하여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 의한 통일전선 형성과 폭력혁명에 의한 정부타도 후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동조세력을 규합, 지하 공산비밀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조직하고 학원의 데모풍조를 이용, 반정부인사와 학생으로 민청학련을 조직했다. (…) 피고인들은 배후에서 민청학련을 지원, 조정하여 일거에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는 국가반란과 공산정권수립을 획책했으며, 이 같은 음모가 사전에 저지되지 않았던들 국가가 전복될 뻔한 건국 초유의 대규모 공산혁명기도사건이었다."

박정희정권은 10년 전인 1964년에도 민청학련사건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한일회담반대운동의 절정인 6 · 3사태가 공산주의자들인 인혁당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덮어씌운 적이 있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용공조작사건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고 저항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법을 다시 한 번 동원한 것이었다.

인혁당사건의 피고인들은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가족의 면회조차 금지되었다. 재판정에는 형식상 피고인 1인당 가족 한 사람만의 방청이 허용되었는데, 그나마도 재판기일을 몰라서 못 가거나 정문에서 제지당해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또한 수갑도 풀지 않은 채 재판을 시작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무시되었고, 변호인의 사건기록 열람도 단 하루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생략되고 증언조차 채택되지 않은 채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과 완전히 일치했는데 이수병, 서도원, 도예종 등 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민청학련에 관련자들이 대거 석방되고 되고 사형선고를 받은 김지하 등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가운데서도, 인혁당 관계자 7명과 민청학련 관계자 중 인혁당과 다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은 여정남은 끝내 감형되지 않았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발표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50일에 걸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며 재판과정도 상식을 초월할 만큼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담당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인채택도 기각시키고, 증거물도 압수해 가버린 이런 재판정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피고인 보기에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판조서가 다르게 변조되어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고인 등이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공판기록에는 "네, 혁신계 동지를 규합 통일적 조직을 구성, 대정부투쟁에 합의하고, 4인 지도부를 조직하여 활동사항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 "네 사실입니다."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족에게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구명 운동하는 가족들을 연행해 구속자들의 죄를 너희들이 대신 시인하라고 닦달하는가 하면, '다시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겠다.' '명동성당이나 목요기도회에 나가지 않겠다.' 라는 각서와 '남편들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라는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마지 못해 각서와 진술서를 쓰고 나와서는 자살을 기도하는 가족도 있었다. 메리놀 외방전교회 제임스 시노트 신부와 베네틱트 츠베버 신부, 그리고 개신교의 조지 오글 목사는 누구보다 열심히 그 가족들을 돌보았으며, 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국내외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러한 활동이 권력당국의 비위를 거슬러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는 정부에 의하여 추방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당시의 유신정권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고, 인혁당사건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1975년 3월에 김지하가 재수감된 것도 인혁당사건의 허구성을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외국인선교사들을 서둘러 추방한 것도 그들이 인혁당 사건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1, 2심 군사법정을 거쳐 대법원에서 1975년 4월 8일 이수병 등 7명에게 사형, 8명에게 무기징역, 4명에게 징역 20년,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도예종 · 서도원 · 이수병 · 송상진 · 하재완 · 김용원 · 우종선 · 여정남 등 8명에게 사형을 확정하였다. 유신정권은 피고인들의 재심 기회마저 박탈했으며, 사형선고 18시간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4시 55분경 전격적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1975년 4월 9일 아침 서대문구치소 앞의 조그마한 공간은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 그리고 한탄의 바다였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 같은 사건 관계자 8명을 잇따라 처형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가족들은 미사라도 드리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생각에서 함세웅(成世雄) 신부가 있는 응암동 성당에 시신을 안치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그들의 마지막 소원마저도 묵살한 채 그들이 정한 장지로 차를 끌고 갔다. 시신을 실은 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문정현 신부 등이 차바퀴 밑으로 들어갔다가 바퀴에 깔려 다리를 다쳤다.

●●● 재판장 판결을 듣고 있는 인혁당사건 관련자들

국제법률가협회는 인혁당 관련자들이 처형된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다. 훗날 역사는 이를 '사법살인'으로 정의하고 국가폭력의 한 전형으로 구분해 오고 있다.

석방학생 복교투쟁과 긴급조치 7호

유신정권이 2·15 조치로 석방된 민청학련사건 관련 학생과 교수에 대한 복교·복직을 전면 불허하자 대학가는 또다시 석방학생 복교문제를 놓고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처음 돌파구를 연 것은 연세대였다. 연세대 박대선 총장이 문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석방학생 복교를 추진하자, 문교부는 연세대에 계고장을 보내면서 총장과 재단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하였다. 3월14일 연세대생 4,000여 명은 긴급 학생총회를 열고 문교부에 대하여 계고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석방학생 복교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들의 석방학생 복교운동은 점차 전 대학가로 확산되고 대규모화하면서 학생들의 주장도 언론탄압 중지, 고문정치 원흉처단, 유신철폐 등으로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3월 31일 고려대생 1,500여 명이 반독재구국선언을 발표하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4월 3일에는 연세대와 서울대, 서강대, 한신대도 대규모 가두시위에 나섰다. 이날 연세대는 휴강에 들어갔으나 학생 3,000여 명은 4일에도 등교하여 이화여대 교정 등에서 경찰과 투석전을 전개하였다. 연일 데모가 계속되면서 서울대도 4월 7일 휴강에 들어갔다. 한편 고려대에서는 4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독재정권 퇴진, 유신헌법철폐를 요구하며 가두진출을 시도하는 격렬한 데모가 계속되었다.

다급해진 유신정권은 4월 8일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여 고려대에 군 병력을 진주시키고 휴교령을 내렸다. 고려대 안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위협하였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동해야 할 긴급조치가 일개 대학의 학생데모 때문에 선포된 것이다.

서울 농대생 김상진의 할복자결

긴급조치 7호로 대학에 군 병력이 진주하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자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농대생이던 김상진은 유신정권의 끝 간 데 없는 부도덕과 잔학성을 보고 죽음을 무릅쓴 결단을 내렸다.

1975년 4월 11일 서울 농대 교정에서 열린 자유성토대회에서 김상진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한 뒤 할복 자결했다. 신사복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연사로 등장한 김상진은 침착하지만 정열적인 어조로 '양심선언문' 을 읽어 나갔다.

>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어두움이 짙게 덮인 저 사회의 음울한 공기를 헤치고 죽음의 전령사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있단 말인가! ……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흩뿌려 이 땅에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
> 우리는 유신헌법의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고발한다. 학우여! 아는가!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저 지하에선 내 영혼에 눈이 뜨여 만족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보리라.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나, 소리 없는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다."

오전 11시 30분. 그는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라는 대목을 읽으며 칼을 품 안에서 꺼내서 자신의 복부를 찌르고 온 힘을 다해 위로 그어 올렸다. 동료들이 부축하자 "애국가를 불러 달라." 고 한 후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는 수원도립병원으로 실려 갔고, 12일 아침 8시 55분쯤 서울대 의대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의 덜컹거리는 침대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시신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벽제화장터에서 화장되었다.

며칠 후 당시 민주언론의 기수라 할 수 있는 기독교방송국에서는 김상진의 육성녹음을 방송하였고, 명동성당 추모미사에서 육성녹음이 방송되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975년 4월 24일 명동성당에서 김상진을 추모 하는 기도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현정권에 남겨져 있는 것은 김상진 군이 죽음으로 촉구한 숭고한 결단뿐" 이라면서 김상진의 죽음에

답하고 그 피에 보답할 것을 촉구했다.

긴조9호 시대

'긴조9호 시대' 란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1975년 5월 13일부터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가 끝나는 1979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무려 6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긴조9호 시대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하고 나라 전체를 항시적인 준계엄상태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은 '한국적 민주주의' 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생존과 안보의 위기감에 내몰리며 민주주의를 유예하고 아예 잊도록 강요받았다.

그러나 '타는 목마름의 기억'으로 '민주주의' 를 남 몰래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 오르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으로 신새벽 '민주주의여 만세' 를 불렀다.

타는 목마름으로

신 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통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 김지하

긴급조치 9호

김상진의 할복자결로 타격을 받은 유신정권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공산화를 빌미로 연일 관제반공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맹목적인 반공열기로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킨 유신정권은 1975년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후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방이나 부정 · 반대 · 왜곡 · 개헌청원과 폐기를 주장하거나 찬동 · 선동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였다. 또 이런 내용을 방송 · 보도하거나 표현물을 제작 · 배포 · 판매 · 소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었다.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나 단체의 장에게 해당자의 해임이나 제적을 명령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휴업 · 휴교 · 정간 · 폐간이나 승인 · 등록취소도 주무 장관의 재량 하에 실시할 수 있었다. 긴급조치 9호는 과히 기존 긴급조치의 종합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서울대 5 · 22시위

긴급조치 9호라는 살벌한 상황에서 학생운동은 반유신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1975년 5월 22일 시위는 고 김상진 학우에 대한 서울대생들의 추모시위였다. 이날 시위는 4월 한 달 동안 격렬한 시위로 이념서클의 학생운동 지도부가 많이 연행되어 발생한 공백 상태에서 선배 복학생 그룹과 탈패, 문학패, 야학패 등이 준비한 기습적인 거사로 1,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였다.

이에 대해 유신정권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우선 시위 도중 체포된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심한 처벌을 받았다. 연행된 80여 명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단순가담자였는데도, 60명이 즉시 구속되고 이 중 53명이 무더기로 제명되었다. 이전처럼 4학년이나 주동자들만 구속시키던 관행은 사라지고, 학내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구속과 제적을 각오해야 되었다.

또 시위사태에 책임을 지고 서울대 총장이 사임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전략본부장과 남부경찰서 서장이 경질되었다. 이후 경찰의 진압태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강경해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긴급조치 9호 이후 경찰, 기관원들이 학내에 상주하면서 학생담당 교직원들과 협력해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대학가의 일반적인 풍경이 되었다.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 대학가의 분위기는 침체되었고 학생

운동은 75년 하반기부터 76년 후반까지 몇몇 연합시위 미수 사건, 유인물 사건, 축제행사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 없게 되었다.

청우회 사건과 장준하의 의문사

유신정권의 탄압은 학생운동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광고탄압과 기자 무더기 해고 등에도 불구하고 해직언론인들이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등을 결성하여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자,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9호하에서 반공법 등을 동원했다. 정부 당국은 1975년 6월 11일 '청우회'라는 조직을 마오쩌둥 노선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부전복 음모를 꾀하는 반국가단체로 기소하고, 동아투위 핵심인물인 이부영과 성유보 등을 청우회를 조직했다는 죄목으로 구속했다.

1975년 8월 17일에는 재야 민주화운동의 중심인물이던 장준하가 포천 약사봉에서 등산 도중 의문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장준하는 광복군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입국하여 60년대 한일조약반대투쟁에 가담하였고 반유신운동을 줄기차게 해온 인사였다. 장준하의 죽음은 재야운동의 약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민주운동 진영은 더욱 굳건하게 민주화의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3 · 1 민주구국선언'

1976년 봄은 재야민주화운동 진영이 3 · 1절 기념미사에서 발표한 '민주구국선언'으로 시작되었다. 기독교 · 가톨릭계 공동으로 명동성당에서 집전된 3 · 1절 기념미사에서 해직교수 이우정이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했던 것이다.

'민주구국선언서'는 박정희 일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가 박탈당하는 현실을 비판했고, 정치 · 경제 · 통일의 세 측면에 대한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피력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권 보장과 긴급조치 철폐, 의회정치 회복 · 사법부 독립 등을 주장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차관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의 전면적 재검토, 팽창예산 지양, 부의 재분배 등을 주장했다. 또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 논의의 전략적 이용 비판과 민주적 통일정책 등을 주장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온건하게 확인한 것이었고, 700여 명의 신자들은 평온한 가운데 예배를 끝내고 각기 흩어졌다.

그러나 이 평범한 미사는 열흘 후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전복 선동사건'으로 규정되고 관련자 20여 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입건되는 대형사건으로 커지고 말았다. 3월 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날의 명동성당 선언문 소식을 접한 박정희는 노발대발했다. 그날 저녁부터 관련자들은 모두 중앙정보부의 안가로 연행되었다. 전 대통령 윤보선을 제외하고 관련자 모두

●●● 구속인사 석방을 요구하는 3 · 1민주구국사건 가족들

조사를 받았다. 결국 김대중 · 문익환 · 서남동 · 이문영 · 안병무 · 윤반웅 · 신현봉 · 문정현 · 문동환 · 함세웅 · 이해동 등 11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특유의 달변과 정연한 논리로 유신정권을 비판하여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해직교수와 목사 · 신부들의 유신통치를 향한 항변은 법정을 '민주주의 강의실'로 만들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 암흑기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파하는 신부와 목사들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신독재를 재판하는 모습이었다. 변호인 측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재판부에 항의해 변호인단이 사임한 가운데, 재판부는 76년 8월 28일 문익환 · 김대중 등에게 유신헌법을 비방하고 그 폐지를 선동한 죄로 8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회의 지도급 인사라는 점에서 국내외에 미친 파장이 컸으며, 재판과정에서 정치적 · 법률적 체제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를 공론화했다. 또한 재야와 정치인, 신교와 구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 3월 22일 윤보선 · 천관우 · 지학순 · 박형규 · 조화순 등 재야지도자 10명은 '3 · 1민주구국선언' 1주년을 맞아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하여 유신철폐와 고문 사찰 · 폭압 정치의 종식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77년 7월 7일 인권회복기도회를 열고 "사회정의가 거부당할 때 소리높이 외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내용의 '7 · 7 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12월 23일에는 윤보선 · 함석헌 · 지학순 · 천관우 · 박형규 등이 '한국노동인권헌장'을 발표했다. 그 즈음 반유신운동의 중요세력으로 새롭게 떠오른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이 헌장은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의 원인을 '억압정치와 특권경제'에서 찾고, 노동자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정치권력 민주화'를 주장했다.

매년 3 · 1절 기념행사가 원천봉쇄 되는 상황에서 재야운동은 1978년에도 '3 · 1민주선언'을 발표했다. 윤보선, 함석헌 등을 중심으로 한 재야인사 66인은 유신체제를 "나라의 안보와 민족

의 번영을 어렵게 하며 민중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안보적이고 반인권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다음 5개항을 주장했다. ①새로운 민주 헌법의 제정, ②양심범의 석방과 민주인사의 복권, ③인혁당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 ④학원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 보장, ⑤자유 언론의 실현.

이 사건으로 함석헌, 문익환 등이 연행되었지만, 이미 반유신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은 국민들 가슴속에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재야운동은 잇따른 시국선언으로 민주주의 담론을 공론화하면서 세력을 결집하고 조직을 확대해갔던 것이다.

[민주주의국민연합]의 결성

긴조9호 시대가 깊어갈수록 반유신민주화운동의 저변과 외연은 점차 확대되어갔다.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대항세력은 내적으로 다양한 부문조직을 아우르고, 공간적으로 지방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975년 3월 27일 긴급조치 석방자들을 중심으로 '민주회복구속자협의'가 결성되었고, 1977년 12월 29일에는 20여 개의 단체 대표 32명이 모여 '한국인권운동협의회'를 결성했다. 1978년 4월 13일에는 해직교수 18명을 중심으로 '해직교수협의회'가 결성되었으며, 다음날인 4월 14일에는 민청학련 구속자와 긴급조치 9호 구속자 등을 중심으로 인권 회복과 민주주의를 목표로 '민주청년인권협의회'가 결성되었다.

1978년 7월 5일 [민주주의국민연합]이 재야 운동의 총결산으로서 발족되었다. [민주주의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과거와 비교할 때 구성원의 수에 있어서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체연합의 조직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는 재야의 반유신민주화운동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음을 반증한다. 국민연합에 참가한 단체는, 한국인권운동협의회, 한국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민주청년인권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 양심범가족협의회, 전국노동자인권위원회, 전국농민인권위원회 등 12개 민주화운동단체였다. 국민연합의 발족성명서 '민주국민선언'에는 12개 단체와 더불어 350여 명이 서명하고 있었다. 이 선언문에서 재야는 '민주·민족·민생'이라는 말로 재야운동의 지향점을 정리하고, '유신체제의 타파'와 '비민주적 악법과 인권탄압 정치 철폐'라는 반유신민주화운동의 당면목표를 밝혔다.

이후 국민연합은 '1978년 8·15선언', '미 하원의원들의 인권탄압 지적에 즈음하여(1978년 9월 8일)', '1978년 10'17국민선언', '정부는 현행법만이라도 지키라(1978년 10월 30일)', '12·12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1978년 12월 7일)' 등의 성명서를 통해 유신체제를 압박했다.

지식인들의 반유신민주화운동

지식인들의 다양한 반유신민주화운동은 국민연합의 중요한 토대이자 핵심역량이었다. 지식인들의 반유신민주화운동은 크게 '자유언론실천운동'과 '자유실천문인운동' 및 '해직교수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식인들의 자유실천운동은 반유신민주화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했다.

언론인들의 언론자유실천운동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자유언론실천운동은 1973년 10월 2일 서울문리대 학생 시위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날의 학생시위가 언론 검열에 의해 보도되지 않자 동아일보사의 젊은 기자들이 철야농성을 벌였고, 이후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기자들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4 10월 19일 기자협회 회장으로 동아일보의 김병익 기자가 선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기자협회 동아일보 지부는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소속 기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언론실천 선언대회'를 개최하여 "언론에 대한 외부 간섭 배제, 기관원의 출입 거부, 언론인의 불법 연행 거부" 등 3개항을 결의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31개 신문 · 방송 · 통신사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기자협회는 산하에 '언론

●●●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

자유수호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유신체제는 『동아일보』 광고 탄압(1974. 12. 24), 『조선일보』 기자해고(1974. 12. 18/ 1975. 3. 7), 『동아일보』 내 기자해고(1975.3.8-12), 『기자협회보』 폐쇄(1975. 3. 10) 등으로 철저히 탄압했지만, 자유언론실천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1975년 3월 18일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 등 114명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고, 3월 21일에는 『조선

일보』의 해직 기자 등 32명이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등 해직 기자들은 사회과학 출판사를 만들어 한국사회의 이념적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시시때때로 유인물을 내서 자유언론에 대한 자신들의 신념을 토로하곤 했다. 1977년 12월 30일에는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감한 이부영과 그에 앞서 출감한 성유보를 위한 합동환영회 겸 송년회에서 양 투위 공동명의의 '민주 · 민족언론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1978년 4월 7일 제22회 신문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늘의 언론은 관민합작에 의한 악덕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규정짓고, '우리는 그동안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언론이라는 새로운 공해가 민중에게 끼치는 체제중독 현상에 몸서리칠 따름' 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6개월여 후인 1978년 10월 해직 언론인들은 10 · 24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을 맞아 '보도되지 않은 민주 · 인권일지' 를 발표했다. 1977년 10월부터 1978년 10월까지 1년간 언론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거나 보도했더라도 박 정권을 홍보하거나 비호하는 등 왜곡 보도한 사건들, 특히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종교계 노동자 그리고 여러 민권단체의 인권운동 등 모두 2백 50여 건을 기사화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동아투위 위원 10여 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다른 동아투위 위원들은 10월 25일부터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 앞길에서 도열하여 구속 사태에 항의하고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 침묵시위에는 조선투위의 동료 기자들과 많은 민주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박 정권은 침묵도열시위 16일 만인 11월 8일에 기동대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자들을 모두 강제 해산했다.

필화사건과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시인 양성우는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75년 2월 광주 YWCA 구국기도회에서 '겨울공화국' 이라는 자작시를 낭송한 것이 문제가 되어 파면당했다. 그런 그가 1977년 6월 13일 수사기관으로 연행되더니, 6월 27일에 해외출판물에 의해 국가모독 및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공소사실은 일본잡지 『세계』 1977년 6월호에 번역 게재된 「노예수첩」이란 장편시가 우리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관해 사실을 왜곡하여 국가를 모독하고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양성우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의 시집 『겨울공화국』을 출판한 시인 조태일과 고은이 구속되었다가 한 달 만에 기소유예로 석방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1977년 11월에는 해직교수 리영희가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20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다시 20일간 조사를 받은 뒤 12월 28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민주화 활

동으로 1976년 2월 해직 교수가 된 리영희는 1977년 9월 1일 창작과비평사에서 『8억인과의 대화』라는 책을 펴낸 데 이어 11월 1일 한길사에서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 두 권이 '해외 공산집단을 고무 찬양한 것'으로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전에 낸 『전환시대의 논리』까지 문제가 되었다. 리영희는 2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은 기각되었다.

문학 · 출판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 가중되자 문인들은 1975년 결성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중심으로 반유신민주화운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갔다. 1977년 11월 18일에는 협의회 결성 3주년을 맞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제3선언'을 통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할 것을 다짐하였다. 구체적 실천으로 우선 '김지하 구출위원회'를 결성하여 1978년 3월부터 '김지하 문학의 밤'을 전국 도시에서 잇따라 개최했다. 또한 1978년 4월 24일 '민족문학의 밤'과 1979년 4월 27 일 '구속문인을 위한 문학의 밤' 등을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열었다. 문인들은 투옥 작가에 대한 구명운동과 동시에 그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독재권력에 질식당한 문학 현실을 고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주창한 것이었다.

해직교수협의회와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긴조9호 시대에 학교는 병영화 되고, 교수들에 대한 탄압도 확대 · 심화되어갔다. 유신정권은 전국 고교 및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대학에서의 군사교육체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교수재임용제를 신설하여 양심적인 교수를 교단에서 내몰았다. 1976년 들어서는 학생들의 엄격한 학사관리를 시달하는 한편 6개 대학의 신문을 포함한 74개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는 등 학원에 대한 억압적인 감시, 통제정책을 강화해왔다.

1977년 이후 학생들의 시위가 빈번하고 격렬해지면서 학원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노골화되었는데, 대학 캠퍼스마다 중앙정보부 요원과 사복형사 · 형사기동대가 건물을 차지하면서 학생들과 교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데 이르렀다. 교수들은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고 행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강요당해야 했다. 심지어는 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하며 학생들의 시위를 막는 데 앞장 서는 교수들도 생겼다. 학생들이 그런 교수들의 행태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했다.

1977년 12월 2일 양심적인 교수들이 '민주교육선언'을 한 것은 이런 참담한 교육현장을 더는 좌시할 수 없어서였다. 1978년 3월 24일에는 성내운, 김동길, 김병걸, 백낙청, 안병무, 염무웅, 이우정 등 해직 교수 18명이 [해직교수협의회]를 결성했다. 해직교수협의회는 4월 3일의 성명서 '동료 교수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당시의 대학을 '민주주의 아닌 다른 것을 민주주의로 떠받들라고 하고 민족 현실을 외면한 온갖 행태를 마치 민족을 위한 것인 양 몸에 익히라고 강요'하는 모순의 현장으로 규정하

면서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다. 5월 26일에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함께 '시인, 지식인을 석방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1978년 6월 27일에는 전남대 교수 11명이 서명한 「우리의 교육지표」가 발표되었다. 전남대에서 발표된 「우리의 교육지표」는 원래 연세대에서 해직된 성내운 교수와 전남대 송기숙 교수가 작성하여 광주 및 서울에 있는 각 대학 교수들에게 서명을 받아 관련 기관과 언론기관에 발표하려 했었다. 그러나 연락에 차질이 생겨 전남대 교수 11명만이 서명하여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밝힌 교육의 지표는 오늘날 진실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민주주의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학원의 인간화 · 민주화, 교육자 자신의 양심과 정열에 기초한 교육, 외부의 간섭 배제와 대학인의 희생에 대한 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함량 등을 다짐하는 선언서였다.

이 성명서가 발표되자 그날로 서명했던 전남대 교수 11명 전원이 중앙정보부 전남지부로 연행되었다. 이화여대의 이효재 교수가 연행되었으며, 송기숙 교수와 수배를 받던 성내운 교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교수들이 연행되자 광주전역의 대학교에서는 항의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전남대 학생들은 교수들의 선언서를 낭독, 배포한 뒤 교수석방과 학원사찰 중지, 어용교수 퇴진을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완전무장한 경찰들은 페퍼포그를 쏘며 도서관에 난입하여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연행하였다.

다음날 7월 5일까지 휴교령이 내렸지만 전남대 학생 1천여 명은 광주 시내를 돌며 민주교육과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학생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흘간 계속된 시위로 500여 명이 연행되었으며, 학생 14명과 유인물을 인쇄해준 시민 2명이 구속되었다. 연일 계속되는 전남대생의 시위에 조선대생들도 전남대생들과 함께 데모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양심교수 · 구속학생 석방과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유신체제는 지성인으로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교수들에 대해 탄압의 강도를 높여 나갔고, 1979년에는 박현채, 문동환, 김병걸, 이문영 교수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들의 반유신민주화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1979년 8월에는 해직교수협의회의 회원이 27명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의 '가미가제'식 투쟁과 자신감 회복

1977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반유신투쟁이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반유신 학생운동을 주도할 중심 세력으로서 교내 지하 서클의 활동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확보하였고, 서클들

간의 연계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시위 방법에서도 주동자에게 주변의 기관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더 큰 규모로 시위를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짜내기 시작하였다. 몇 사람이 기관원들의 주위를 분산시키면서 학생들을 결집시키도록 주의 깊은 사전 계획이 세워졌다. 주동자들은 경찰이 접근한기 힘든 난간이나 대강당, 도서관 창 등 갖가지 장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규모시위를 조직하였다.

1977년 10월 7일 서울대 사회학과 심포지엄 때 발생한 시위는 긴급조치 9호 이후 최초의 대규모 시위였다. 1천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기동경찰의 최루탄과 페퍼포그에 대항해 교내 곳곳에서 투석전을 전개했다. 4백여 명이 연행되어 8명이 구속되고 제적 23명, 정학 38명 등 대량 학사 징계가 뒤따른 가운데 10개 단과대학이 20일간 휴업했다.

10월 25일에는 연세대생 2,000명이 시위를 벌여 정문을 돌파하여 시내로 진출하였다. 이날 시위는 채플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강당 4층 창문을 깨고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시작되었는데, 순식간에 학생들을 규합하여 세를 형성하였고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서강대와 이화여대까지 나갈 수 있었다. 10월 31일 이화여대 시위가 있었고, 11월 4일 서울공대와 고려대에 유인물이 살포되었다.

이어 11월 11일에는 서울대에서 김경택 등 6명이 중심이 되어 도서관을 점거하여 아크로폴리스 광장의 시위를 이끌었다. 이날 약 2,500명의 학생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저녁에는 버스 정류장에 모인 500여 명의 학생이 다시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등 하루 종일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었다.

1978년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반유신투쟁은 반독재투쟁의 단계에서 벗어나 근로대중의 생존권 문제와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학생운동가의 노동현장투신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이 무렵부터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직접 옹호하는 구호를 내세우게 된 것이었다. 1978년 동일방직 노조에 대한 탄압과 이른바 함평고구마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생운동은 유신 철폐 및 학원자유와 함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운동 탄압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1978년 5월 8일 서울대에서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원민주선언을 발표하여 유신 철폐, 구속자 석방, 학생회 부활,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27일까지 동맹휴학이 이루어졌다. 다음날인 5월 9일 이화여대에서 3,000명이 모인 채플이 대규모 학생 시위로 전환되어 경찰 기동대가 교내에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어 1978년 5월 16일에는 한신대에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기관원들이 학내에 상주하는 당시 상황에서 각 대학이 이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학생 대중의 불만이 그만큼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었다.

1978년 6월 12일 서울대 시위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

날 김수천, 이우재, 이필렬, 성욱 등은 인문대학 앞에서 3,000명 이상이 운집한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시위 과정에서 4월 26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반정부 집회를 공개적으로 열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6월 26일 당일 정보기관과 경찰 병력이 광화문에 집결한 가운데서도 세종문화회관 앞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숭실대, 이화여대 등 각 대학 학생 1,0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밤 10시가 넘도록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격렬히 진행되었다. 도심 공개시위가 성공을 거두자 정권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학생운동 측은 상당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어 1978년 9월에는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역시 2,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특히 9월 14일 고려대 시위에는 3,0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교내에 상주하는 기관원들의 초소를 부수고 거리진출을 시도하였다. 11월 17일에는 경북대생 1,000여 명 이상이 유신 철폐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여 파출소 한 곳과 경찰 차량 8대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함평 고구마 사건

관제농협의 수탈과 저곡가 정책으로 신음하던 농민들도 가톨릭농민회 등의 도움으로 투쟁을 벌였다. 1978년 봄부터 벌어진 함평고구마 사건은 이제 농민들도 민주화의 대장정에 나섰음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1978년 4월 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700여 명의 농민들은 광주 북동 천주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함평고구마 피해보상과 농민회 탄압중지, 구속회원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이 날 농협의 전남도지부장과의 면담이 기동대에 의해 저지되자, 농민들은 성당 뜰에서 연좌농성에 이어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 관계당국과 중앙정보부 도지부장, 농협 도지부장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27일 YMCA 인권기도회 참가자들이 단식현장에 몰려오자 기동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고 20명을 연행하였다. 단식 중인 농민 회원들은 '전국 회원에게 보내는 글' 을 발송하여 전국 회원들의 성원을 촉구하였다.

29일 당국이 피해액을 보상하고 강제연행된 이들을 석방하기로 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단식 농성 중에 연행된 이상국, 조봉훈이 석방되지 않음으로써 단식투쟁은 계속되었다. 결국 5월 1일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신부와 개신교 인사, 양심인사 500여 명이 기도회를 열어 전국농민인권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속 중인 회원의 석방과 농민회 탄압 중지를 요구하였다. 다음날 이상국, 조봉훈의 석방으로 단식농성은 끝나게 되었다.

함평고구마 사건은 정부의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농촌사회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농협의 폐해가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특히 농민의 경제적 이익옹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 앞

장서야 할 농협이 농민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묵살, 회유하는 행태는 농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카톨릭농민회 회원 농민들은 당시 유일한 합법적 공간이었던 교회와 연계하여 그들의 요구를 알릴 수 있었고, 이후 비민주적이고 부패가 구조화된 농협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나갈 수 있었다.

동일방직 사건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각성하기 시작한 노동운동은 도시산업선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등의 도움을 받아 의식화 · 조직화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절규는 1978년 동일방직 사건으로 표출되었다.

1972년 인천 만석동 소재 동일방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을 지부장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탄생하자, 회사측은 협박과 폭행, 부서 이동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였다. 1976년 7월에는 회사측이 불법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어용 지도부를 구성하려하자 여성노동자들은 파업농성으로 이에 맞섰다. 저임금을 항의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강력한 제재에 나체시위와 단식농성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72명이 연행하고 1백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1978년 2월 21일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장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인분을 뿌리며 강제해산시키고 12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3월 10일 노동절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장충체육관에서 시위를 벌여서 이로 인해 중계방송 중단사태가 빚어졌다. 3월 26일 여의도광장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서는 노동자 6명이 단상에 뛰어 올라가 "노동3권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서 정치적 시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

동일방직 사건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

구조차 억압하는 유신독재와 어용화된 한국노총 지도부, 기업주가 결탁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던 70년대의 대표적인 민주노조 탄압사건이었다. 동일방직사건은 특히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기독교 인권운동 및 기존의 지식인 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들의 연대투쟁은 이후 민주노조운동, 인권운동과 정권퇴진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9년의 현장 속으로…

1979년에 들어서면서 유신체제는 드디어 파탄의 조짐을 드러낸다. 학생데모가 일상화하는 속에서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YH노조 신민당 농성사건, 신민당 김영상 총재 의원직 제명 사건 등으로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진영 간의 대립은 정점을 향해 달린다. 10월 부산대 학생시위가 부마민주항쟁으로 발전하면서 유신체제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다.

이제 급박하게 펼쳐졌던 1979년의 현장으로 들어가보자.

고문을 일상화한 야수정권

긴조 시대에 국민들은 안보위기에 대한 약효가 떨어질 만하면 간첩사건 · 용공조직사건이라는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1979년의 봄도 예외는 아니었다.

1979년 3월 9일 크리스찬아카데미의 활동가들이 대거 연행되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노동조합이나 농민단체, 여성단체 등의 중간집단을 육성하고 노동자, 농민들의 의식개발에 주력해온 단체였다. 관계당국은 이들이 불온사상을 가진 불법지하 용공서클이라고 발표했고, 각 언론은 "불법용공서클 일당검거" "불법용공서클 적발, 크리스챤아카데미 침투" 등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참혹한 고문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계에서 항의 성명서와 청원서가 빗발쳤다. 결국 이 사건은 유신정권이 아카데미를 통한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의 활성화를 막고 기층 사회운동을 고립, 차단시키려고 고문과 반공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조작한 사건임이 밝혀졌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은 유신정권이 고문을 상습화, 생활화했던 야수정권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안동농민회 오원춘 사건

1979년 5월 5일 감자농사 보상 활동에 앞장섰던 안동 농민회 오원춘이 행방불명되었다. 오원춘은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에게 폭력적으로 납치되어 울릉도에 감금되었다가 보름만에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납치사실을 교회에 보고하기까지 상당한 위

협을 느꼈던 오원춘은 6월 13일 농민운동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 이에 안동교구는 7월 17일 이 사실을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하여 전국에 폭로하고 오원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답변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경북도경은 안동교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농민운동 탄압이라는 왜곡된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신부 및 농민회 간부를 구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조사령이 내려지고 농민회와 교회에 대한 용공시비가 일면서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8월 6일 신부 120명, 신자 6백여 명이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전국기도회를 열고, 사제단과 가톨릭농민회 회원 80여 명이 20일간 항의농성을 벌이는 한편 8일간의 단식기도, 가두 촛불시위, 공정재판요구 및 집단방청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명동성당 기도회에는 전국14개 교구 700여 명의 사제들이 참석했고, 각 교구에서도 수많은 기도회에 수만 명이 참여했다. 유신정권과 천주교회의 대결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의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오원춘 사건은 한 농민의 인권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건이었으며, 유신말기의 인권유린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농민의 정치투쟁으로서는 70년대의 절정을 이루는 이 사건은 교회의 일치단결과 유신독재 종식에도 큰 몫을 했다.

YH무역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투쟁 사건

YH무역은 가발수출의 호경기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창립 4년만인 1970년에 종업원 3천 명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회사의 부채와 적자운영,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1979년 8월 6일 일방적으로 폐업을 공고했다. 폐업철회와 임금청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YH노조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기숙사와 식당까지 폐쇄하자, 신민당사에 찾아와 회사의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계속했다. 당국이 신민당사에 경찰을 투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극도로 불안해진 노동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투신자살과 할복으로 저항할 것을 결의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다.

8월 11일 새벽 2시, 1천여 명의 경찰이 신민당사에 난입하여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기 시작했다. 기동경찰 수백 명이 들이닥쳐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무차별 구타하며 계단으로 끌어내자, 격앙된 몇몇 노동자들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중과부적, 10여 분 만에 모두 당사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농성 노동자 중 한 명이었던 김경숙이 희생당했다. 김경숙은 당사 뒷마당에서 왼팔 동맥이 끊긴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새벽 2시 30분쯤 숨졌다. 항의의 뜻으로 동맥을 끊었다가 진압 도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민당 의원과 당원, 취재 중이던 기자 등도 경찰

●●●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을 끌어내는 경찰들

에 구타당하여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신민당 당원 26명을 강제로 연행하였고 YH무역 노조의 신민당 농성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인명진, 문동환 목사 등 8명을 구속했다.

YH무역 노동자 농성투쟁은 노동운동, 기독교 등 각계 사회운동세력에게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신민당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게 되자, 유신정권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총재직직무정지와 의원직 제명으로 대응하여 정국이 극한대치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또한 YH사건의 배후 불순세력으로 지목된 기독교세력과 청년, 학생세력 등 전 사회세력이 반유신 연대투쟁으로 결집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부마민주항쟁

1979년 들어서 전국 각 대학에서 유신반대 시위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특히 1979년 8월 11일 YH사건은 학생운동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1979년 9월 3일 강원대학생 800여 명이 YH사건 규탄과 유신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튿날인 9월 4일에는 대구의 계명대, 영남대, 경북대의 학생들이 연합하여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경북대학생협의회'를 결성하여 유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에서 근로민중의 생존권과 긴급조치 철폐,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1979년 9월 서울대의 '근로민중 생존권 수호선언'이나 이화여대의 '이화민주선언문' 등은 노동문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박 정권은 10월 9일 '남민전' 사건을 발표하여 정국의 반전을 꾀하였으나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하면서 결정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부마민주항쟁의 발단은 10월 16일 부산대 구내 도서관 앞에서 학생들이 '민주구국선언문' 발표 등 반정부 시위를 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시민들이 합세한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전개되었다. 시위대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정치탄압 중단과 유신정권 타도 등을 외치며 파출소 · 경찰서 · 도청 · 세무서 · 방송국 등을 파괴했다. 18일과 19일에는 마산 및 창원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18일 0시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1천 58명을 연행,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으며, 20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는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부마민주항쟁 직후 유신정권은 소요의 배후에 조직적 불순세력이 개입한 징후가 있다고 하면서, 소요의 특징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폭동에 가까운 것으로 방화 파괴 행위를 자행하면서 화염병, 각목 등과 사제 총기까지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총기가 시위 군중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과장된 발표는 마침 며칠 전 적발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의 무장투쟁 계획과 연계되면서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합리성을 상실한 유신정권은 시위에 가담한 시민과 학생들을 모두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고 매도했고, 그들을 잠재적인 무장 폭도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왜곡과 폭압적인 탄압의 관성이 광범위한 반대 세력을 형성시켰고 마침내 10 · 26의 배경이 되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로 이어졌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다

부마민주항쟁은 끝났지만 이제 누구의 눈에도 박정희와 유신독재의 몰락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이 "탱크로 한 2백만 명쯤 깔아뭉개면 별일 없을 것"이라는 끔찍한 말을 태연자약하게 하는 동안 박정희의 몰락은 바로 옆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 현장을 재현하는 김재규

운명의 10월 26일 저녁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본인의 표현대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향해 총을 쏘았다.' 유신의 마지막 보루였던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알 몇 방으로 유신체제와 18년 박정희 독재는 역사에 오점만을 남긴 채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3

12월의 밤,
그해 5월의 꽃바람

어느 가을날의 등굣길

하늘아. 사람의 한평생에 '역사'라는 추상명사가 폭염이나 태풍처럼 강력하고 생생한 실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을까. 엄마는 열일곱 살 가을에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했단다.

1979년 10월 26일, 쪽빛 하늘이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한 가을날이었다. 나는 그날따라 늦잠을 자서 시청 전철역에 내리자마자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덕수궁 앞 지상출구로 나왔을 때 처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난데없는 장갑차와 총을 든 군인들이었다. 처음 실물로 보는 장갑차가 6·25전쟁영화에서 본 것보다 위압적이지 않아서 장난감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멈춰 설 겨를이 없었다. 지각하면 교련선생님께 머리통을 쥐어 박히고 운동장 열 바퀴 토끼뜀을 해야 했거든. 덕수궁 돌담길을 내처 달리는데 대법원 앞에도 장갑차와 집총한 군인들이 서 있었다. 문학소녀였던 나는 설핏 총 든 군인들이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외다리병정 같다고 생각했다. 정말 총알이 들어 있을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설핏 올라왔지만 다리는 계속 달음박질을 쳤다.

교문에 들어서는데 교련선생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근데 학교가 왜 이리 썰렁하지? 살금살금 교실로 들어가니 친구들이 엉엉 울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죽었다고! 순간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안이 벙벙하고 왠지 슬퍼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회의 중인 듯 뒤숭숭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10시가 넘어서야 담임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다…….

하늘아. 당시 여고 1학년생이던 엄마는 사회의식이나 정치의식에서 거의 '백치'에 가까웠단다. 유신교육 덕분이었지. 지금처럼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정보가 넘쳐나고 비판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었어. 자유와 인권을 위해 유신체제에 저항하고 혹독하게 탄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언론 보도가 금지된 탓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저 풍문으로만 흘려들을 따름이었다. 하물며 집과 학교 사이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왕복하던 여고생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었지.

박정희 유신체제는 국민들을 순응시키기 위해 억압과 사회통제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교육과 국민동원정책을 시행했다. 반공주의·성장주의·국가주의는 유신체제의 대표

적인 이데올로기였는데, 이것들은 국가안보와 반북한 반김일성, 조국근대화, 선성장후분배, 수출입국, 한국적 민주주의 등으로 구체화되었지. 청와대와 내무부, 문교부는 소위 국민들의 의식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반공교육, 안보 · 통일교육, 새마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체적으로 가동했단다.

하늘아. 엄마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반공포스터와 반공글짓기, 반공웅변대회에 매번 참가했단다. 반공포스터를 그릴 때 북한공산당을 뿔 달린 도깨비로 새빨갛게 색칠하기 위해서 포스터 칼라의 빨간색을 따로 두 개씩 더 사야했던 건 나만이 아니었을 거야. 혼 · 분식 검사에서 걸리면 복도에 나가서 벌을 서고 부모님까지 반성문 비슷한 결의서를 써내야 했지. 호국정신의 상징인 이순신 동상을 교정에 세우기 위해 월요일마다 폐품을 수집해야 했고, 어느 해인가는 흥행에 실패한 '성웅 이순신' 영화를 단체관람하기도 했어. 왼손잡이인 나는 체육시간에 우향우 좌향좌를 할 때마다 매번 긴장해야 했고, 교련시간이면 삼각건 묶는 법이 틀릴까봐 진땀을 흘려야 했단다.

거리에서는 장발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가위를 들고 젊은이들을 쫓아다니고, 미니스커트 단속을 위해 자를 들고 아가씨들의 치마길이를 재기도 했지. 어느 날 내가 좋아했던 가수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유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사라져 버리고, 가사가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좋아하던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도 부를 수도 없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 거리에서 강제 이발당하는 시민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부모나 형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건 주어진 환경이었고 그저 적응해야 할 조건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

하늘아. 유신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 아래 자유와 인권을 저당잡히고도 경제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조르며 노동하는 '국민' 이라는 배역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조금 침침한 배

경색일 뿐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자신의 배역에 의문을 갖고 무대의 규칙에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나타나 목을 움켜쥐는 검은 손, 배후의 어두운 힘이었단다.

철옹성처럼 완벽하게 구축된 유신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유신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단다. 유인물 한 장을 돌려 읽거나 반정부 구호를 서너 번 외친 것만으로도 체포와 투옥, 고문을 감수해야 했다. 반유신운동가들은 완강한 철옹성에 부딪혀 깨지는 달걀 한 알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암흑의 얼어붙은 땅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와 인권을 되찾기 위해 삶을 던져 한 점 불꽃을 피워 올렸다. 혹독한 비바람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심지를 북돋고 더 큰 불꽃들로 성장하고 단련되어갔다. 그 불꽃들의 연대가 겨울공화국의 밑둥치를 녹이고 마침내 허물어지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것이 유신시대 반유신민주화운동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란다.

그러나 반유신민주화운동이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박정희는 종신집권을 하기 위해 늘 자기 스스로 새로운 갈등과 모순을 만들어내곤 했다. 유신체제는 결국 박정희 자신이 만들어낸 권력 내부의 갈등과 균열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70년대 내내 저항의 불꽃이 끊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박정희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아니었다. 유신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박정희의 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반유신민주화인사, 반유신운동가로 성장해갔다. 다양한 성향의 운동가들을 묶어세운 가장 강력한 구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신 반대'였다. 유신헌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너무나 참담하게 유린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민주회복'을 주장했고, 그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민주주의란 헌법상에 규정된 절차적, 제도적인 원리와 규범을 의미했다.

소박한 저항의 수준에 머물렀던 그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이나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유신말기에 가면서 다양한 공동투쟁이 조직되었지만 굳건한 연대와 통일적인 지도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가 그들이 신군부에게 민주주의를 찬탈당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만약 유신체제가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의 시해가 아니라 민중항쟁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우리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불길했던 12월의 밤

하늘아. 가을이 깊어가면서 학교수업은 정상을 되찾았지만, 11월 말로 예정된 교련검열은 흐지부지 맥빠진 것이 되었다. 학기말고사가 끝나자 우리들은 강당에 모여서 다가오는 80년대가 100억 달러 시대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배웠다. 화려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엄청난 외채가 쌓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

●●● 12 · 12 및 5 · 18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선 전두환(오른쪽), 노태우(가운데)

다. 비로소 조금 엿보게 된 진실은 비관적이었지만, 그것도 새로움이라면 새로움이겠지.

1979년 12월 12일,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단다. 도서관에 남아서 늦게까지 책을 읽었던 나는 밤 10시경 탄 버스가 한강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학교 수위실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난생 처음 외박을 한 셈이었단다. 자정 무렵에 광화문 쪽에서 뭔가 둔중한 쇠붙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들렸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건 탱크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였지. 한참이 지나서야 그날 밤의 사건이 신군부에 의한 12 · 12 군사쿠데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전두환을 위시한 12 · 12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은 독재 권력의 화신 박정희가 키운 아들들이었지.

그해 5월의 꽃바람

12 · 12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국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혼미한 정국을 바라보며 학내 민주화에만 열중하던 학생들이 사회민주화 투쟁의 전면에 나선 것은 계엄사령관이자 12 · 12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면서 부터였다. '서울의 봄'은 진달래꽃사태처럼 깃발과 구호로 물결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초순 나는 근처의 한 대학에서 개최하는 문예백일장에 나가게 되었지. 그런데 그 대학의 캠퍼스에 도착했더니 백일장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총학생회가 가두진출을 결정했기 때문이었지. 나는 그날 물밀듯이 교문을 빠져나가는 시위대의 행렬을 처음 보았다. 매캐한 최루탄 냄새도 먼발치에서나마 그날 처음으로 맡아보았단다.

'광주사태' 에 관한 유언비어가 떠돈 것은 얼마 후였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유언비어에 속지 말라며 끔찍한 유언비어의 내용을 몇 개 소개해줬지. 계엄군이 여성의 젖가슴을 도려냈다는 말을 들으면서 토할 것 같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하지만 그건 정말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초등학교 시절 위문편지를 열심히 쓰며 성장했던 여고생에게 군인들이란 늘 '국군장병 아저씨들' 이었거든. 국군장병 아저씨들이 어떻게 같은 동포를 죽일 수가 있겠니?

여름방학이 끝나자 과외금지가 발표되었고, 대학입시에서 본

고사가 폐지되었어. 몇 달 후 고3 입시생이 되어야 하는 나는 모든 잡념을 버리고 수학정석과 성문종합영어에 얼굴을 처박고 지내야 했다.

80년대의 전쟁

하늘아. 엄마가 광주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1년 후 대학에 가서였다. 광주의 학살은 충격이었고 경악이었단다. 제 나라 시민을 총칼로 학살한 군인정권……. 광주의 비극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결단으로 내몰았지.

이제 광주의 혼령은 젊은 학생들의 투쟁을 통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각 민주세력들도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민주화를 위한 전선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그건 '전쟁'이었다. 제 나라 국민들을 학살했던 그들은 '적'이었다. 전사가 되기로 결단한 젊은이들은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고 민중의 바다로 흘러갔다. 작은 물방울이었던 나 역시 그 물줄기 속에 스며들어 흘러갔다. 어쩌면…… 나는 바다를 보았을까?

4

상처와 치유, 성장을 향한 여정

하늘아. 우리 현대사에서 1970년대를 이루는 나이테에는 유신체제라는 아픈 옹이가 박혀 있다. 옹이가 박혀도 나무는 성장하지만 옹이의 주변은 나무의 결이 휘어지거나 틀어지게 되지. 유신체제는 우리 현대사의 상처였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상흔을 남기고 있단다.

역사적으로 1970년대는 한국사가 오랜 좌절을 극복하고 역사발전을 기약할 만한 모처럼의 기회였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역사발전의 기회를 앗아가 버렸다. 5·16군사쿠데타에 의해서 4·19혁명의 낙관적인 전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처럼, 1972년의 유신으로 역사는 또 다시 반동에 휩싸이고 말았다.

사회가 변화 성장하는 과정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시기가 있는 것이어서, 그 변동의 시기를 놓치고 나면 기회는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성장이 지체된 후유증만 떠안게 된다. 만일 한국사회가 70년대를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니고 있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가운데 통과할 수 있었다면, 80년대의 파탄은 물론 90년대의 경제위기나 오늘날과 같은 지역갈등과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정상적인 역사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시킨 것이다.

유신체제가 남긴 것

우선 유신체제가 우리 역사와 사회에 남긴 과오와 폐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현재 우리사회에 팽배한 물신주의와 몰가치성은 유신시대의 유산이다. 유신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온 국민을 생존을 위해 무한경쟁으로 줄달음치는 경제동물로 전락시켰다. 속도숭배와 물량주의, 경제제일주의는 정신문화적 가치에 대한 경시를 낳아서 균형 잡힌 가치관의 정립을 저해했다. 또한 인권을 생존과 경제성장에 종속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인간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를 배태시켰다.

둘째, 현재 우리사회의 몰역사의식은 유신체제의 유산이다. '유신' 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의 '메이지유신' 을 모방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체제는 우리 사회에 일제 식민잔재를 유지시키고 더 강화시키기까지 했다. 반상회와 민방위교육, 새마을운동 등에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 교육과 국민동원정책은 일제가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써먹은 수법을 그대로 재현 복제해온 것이었다. 유신체제는 정치 사회, 교육 각 분야에서 일제 식민잔재를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는 것을 저해했다.

셋째, 부정부패의 구조화이다. 유신정권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 는 명제를 실증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정치인에 대한 상납구조, 정치 비자금 운용 등 유신정권은 부정부패를 사회구조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현재 우리사회에 복마전처럼 뒤엉킨 부정부패의 뿌리는 유신체제 아래서 자라고 무성해진 것들이다.

넷째,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양극화 문제는 유신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신체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정책으로 민중을 희생시키고 소수의 재벌 독점기업만을 살찌웠다. 70년대에 본격화된 빈부차이는 현재 사회양극화 문제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다섯째, 유신체제는 우리사회에 지역감정의 골을 깊게 파이게 만들었다. 유신정권은 특정지역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고 경제개발과 인재의 등용 부분에서 철저하게 차별했다. 또한 선거때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분열과 통치의 전술' 을 교묘하게 구사했다. 유신체제가 생산해낸 지역감정은 현재까지도 정치와 선거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군사주의 문화는 유신체제의 부정적인 유산이다. 토론과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보다는 훈육을 중시하는 주입식 교육, 줄 세우기와 훈화로 일관하는 조회시간, 학교 수련회에서의 기압과 군기잡기, 강력한 선후배 문화……. 군사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언어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심성 깊숙이까지 내밀하게 뿌리내리고 우리의 정신과 일상을 불구화시키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유신체제가 저지른 폐해 중에 가장 큰 것은 인류 진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쓰여야 할 이 나라의 소중한 인력을 '민주 대 반민주' 라는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다. 사회 발전에 창조적으로 쓰여야 할 에너지를 체제부정과 저항운동에 쏟아 부으면서, 우리는 소중한 사회적 자원과 힘을 소모하고 탕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저당 잡히고 체포와 투옥을 감수해야만 했다. 심지어는 비밀리에 죽임을 당하거나 합법적으로 살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의문사진상구명에 관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등 네 가지 법안이 입법 · 시행되었다. 이들 법안의 입법과 시행으로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 특히 폭력적 억압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낙인찍히게 되었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에 기대어 무소불위의 군력을 행사하고 시민에게 폭력을 가했던 기관들인 중앙정보부, 국정원, 보안사, 검찰, 교도소 등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신시대의 민청학련, 해직언론인 등 지식인들의 운동, 전태일과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 산업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내온 것은 1995년부터 전개된 광주학살자 처벌투쟁과 국민정부 하에서 전개된 유가족들의 400여 일에 걸친 농성투쟁에 의해서였다. 시민단체가 발의하고 청원하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자, 국회나 각종 국가기관에 진출한 민주화개혁세력이 입법과 시행에 나섬으로써 가능했던 승리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등 국가기관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처벌은 거의 뒤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통탄스러운 현실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열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열고 나아가야 할 과제들

첫째,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심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마저도 파괴했던 유신체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대통령 직선제'라는 제도적 절차적 부분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87년 6월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6 · 29 선언'으로 무장해제 되었던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까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형식적 부분에서만 진전이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직접선거나 삼권분립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 평등 · 사회정의 · 각종 차별 철폐 · 인권과 같은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형식으로 전락한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채워 넣는 일이 너희 세대의 과제이다.

둘째, 물신주의를 넘어선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신시대에 배태된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은 근래에 들어서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까지 치닫고 있다. 정치권력의 독재로 고통 받았던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자본의 독재' 시대이다. 군사정권의 폭압은 '자본의 직접통치'로 바뀌고 있으며, 자본은 언론, 지식, 학력과 인맥 등 보다 다원화된 모습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인간관계, 몸의 장기까지도 사고파는 상품으

로 전락시켜서 소비해버리는 자본만능시대에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일은 치열한 사상 · 문화적 투쟁이 필요하다. 자기 안의 물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섬세하고 긴장된 싸움이 펼쳐져야 한다.

셋째, 과거의 상처와 어둠을 청산하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세우는 일이 절실하다. 근래에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작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친일, 친미 사대주의와 독재 권력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화하는 세력들 역시 만만치 않은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하늘아. 역사의 지층에 화석으로나 남아 있어야 할 괴물들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면, 그것도 모자라 왕성하게 증식하고 있다면…… 넌 기분이 어떻겠니? 우리 사회에는 죽은 박정희를 되살리고 역사를 퇴행으로 되돌리려는 세력들이 있단다. 박정희 신드롬은 근래에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 속에서 빠른 속도로 증식하고 있지. 그들은 박정희시대의 경제발전을 들어서 유신체제를 개발독재의 불가피성으로 합리화하려고 한단다. 그 주장의 밑바탕에는 경제에 인권을 종속시키는 위험한 의식이 도사리고 있지.

하지만 경제개발을 위해서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긍심은 무너진단다. '엽전은 어쩔 수 없어.' 라는 체념을 박정희가 '엽전은 두들겨 패서 되게 만든다.' 는 확신으로 바꾼 것이 되거든. 우리 국민은 모두 '어쩔 수 없는 엽전' 이었고 박정희는 그 '엽전을 두들겨 패서 되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셈이지. 이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짓이다.

하늘아. 지난 시절 독재권력과의 투쟁도 중요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시절을 제대로 기억하고 올바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바로세우기는 역사를 누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느냐를 둘러싼 싸움이자, 상처받은 역사를 치유하고 살림하기 위한 운동이란다.

'역사' 라는 벽화 앞에서…

하늘아. 지금까지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가 혹시 너무 딱딱하거나 암울하게 들리지는 않았니? 하지만 어두운 배경색 너머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즐겁고 재밌는 장면들도 숨어 있단다. 매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흰 교복에 고추장물이 점점이 튀어 박힌 것도 아랑곳없이 까르르 웃던 일, 마대자루 같은 검정교복이지만 어떻게든 멋을 부리려고 치마 길이를 짧게 줄여 입었지. 교련선생님을 '개코' 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씹어대는 맛도 별미였고, 담장너머 남학교의 밴드부를 곁눈질해 보는 것도 재밌었어. 요즘 너희들과 비슷한 부분도 많았을 거야.

하늘아.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엄마는 유신시대 억압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단다. 70년대가 키워낸 젊은이들은 식민과 전쟁을 겪고 조국근대화를 이끌어온 부모세대를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저항했지. 하지만 우리들 자신이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고 군사문화주의적인 성향이 인성 밑바닥에 스며 있기도 했단다. 가끔씩 나는 우리 세대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것이 유신체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암울한 화면 속에서 칼춤을 추는 독재자와 온몸으로 그에게 맞서는 저항자들의 몸짓은 전혀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유신시대라는 동시대에 갇혀서 언듯 닮아 보이기조차 한다.

암울한 풍경화로 흐릿하게 남아 있는 유신시대를 내가 좀 더 깊게 성찰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에 들어서이다. 나의 성장기와 내 안에 남아 있는 유신시대를 돌아보게 된 것은 자라나는 하늘이 너를 보면서였단다. 베이비붐 세대였던 우리세대가 성년이 되어서 이룬 핵가족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로도 충분하다' 로 바뀌었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너희들은 영원히 '피터팬' 이고 싶어 하는 덩치 큰 아이들이다. 엄마는 가끔 너희들이 자제력이 없다고 생각되어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발산하는 자유와 활력에 현기증과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단다.

하늘아.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다.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150억년 우주진화의 역사가 들어 있단다. 우리 안에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그 까마득한 윗세대들의 유전자가 켜켜이 쌓여 있단다. 역사도 마찬가지야. 역사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대에 걸쳐서 그리고 덧칠하고 고쳐 그린 거대한 벽화라고 상상해 보자. 너희 앞에 놓인 캔버스는 백지가 아니다. 지질학적 단면처럼 역사의 지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벽화 위에 너희는 너희 세대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때로는 덧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우고 긁어내고 새롭게 그려야 할 때가 있을 지도 몰라. 하지만 그 새로움의 밑바탕에는 늘 옛 흔적이 상처처럼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지.

하늘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식민과 전쟁, 근대화의 세대였다. 엄마 아빠 세대는 그 근대화의 수혜자이면서 반민주적인 억압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대였지. 지금 하늘이 세대는 그 민주화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세대이다. 이제 너희 세대는 사회정의와 경제적 평등, 인권과 민족통일이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새롭게 채워나가야 한다.

하늘아. 이 글을 쓰는 동안 엄마는 나 자신의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면서 성장했단다. 엄마가 성장했다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니? 어른들도 성장한단다. 그리고 사회도 성장을 하지. 개인이 그렇듯이 사회도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회로 진화할 수 있단다.

나는 오늘 6월의 광장에서 너희가 부르는 '오! 필승 코리아'가 '오! 평화 코리아'로, '오! 통일 코리아', '오! 인권 코리아'로 울려 퍼지는 날을 기대한다. 너희가 만들어내고 살아갈 세상이 평화와 통일, 인권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기를 바란다. 누구나 자기다움의 씨앗을 싹틔우고 온전히 꽃피워낼 수 있는 세상, 그 다움꽃들이 어우러진 풍성한 꽃밭을 상상한다. 그 세상을 향한 하늘이의 자람과 진화를 기대한다.